

# “5월 단체 내부 혁신...공법단체로 단계적 통합 나서야”

### 5·18 유공자단체 “단체 분열·부정적 여론 반성” 사죄 구속부상자회 우선 통합...회원간 갈등 해소 계기되길

5·18 유공자단체가 5월 단체의 반성과 내부 혁신, 5·18 공법단체로의 통합을 주장하고 나섰다.

5·18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는 5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월 단체가 그동안 분열돼 화합하지 못하고 5·18정신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5월 단체간 우선 가능한 통합부터 단계적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5·18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는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로 구성됐다.

이들은 “5월 단체는 독재의 어둠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공법단체설립법안’ 공포에 이르기까지 41년이 흐른 지금 국민들의 많은 희생과 헌신적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월단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고 5월 단체 분열 등으로 인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고 고개 숙여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5월 단체의 자정과 혁신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먼저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1980년 5월27일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기동타격대원, 민주기사동지회, 도청 항쟁지도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길 희망한다”며 “5·18구속부상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통합돼 불필요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회원들 간 갈등을 추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국가보훈처는 5·18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가 5·18민주유공자증을 가진 모든 회원 당사자의 총의로 출범할 수 있도록 5·18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정보와 규정도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5·18공법단체의 임원과 회장은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공로자회, 부상자회로 구성된 5·18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가 5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월 단체의 반성과 내부 혁신, 5·18공법단체로의 통합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 바 회장과 임원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1

9조, 제65조 제8항을 준용토록 해 범죄경력 등을 회원에게 공개해 자율적 검증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경력증명서) 체계가 작동 가능하도록 규정으로 명문

화해,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겨울기자

## 광주시, 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5등급 차량 운행에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조기폐차 신청 또는 저감장치부착 신청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 ‘지역번호(062)-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속 제외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도 올해 말까

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환경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대기보전과(062-613-4320~6)에 신청하면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며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탄기자

## 전남개발공사, 재정 신속집행 행안부장관 표창

전남개발공사가 2020년 상반기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속 집행에 적극 참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개발공사는 지난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액 1천531억원 대비 741억원을 초과한 2천272억원을 집행, 목표 대비 148%의 성과를 거뒀다.

개발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기가 둔화되고 민간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선제 대응 차원에서 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주기적으로 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오픈지구, 죽림지구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관리, 지역 소비·투자 확대를 꾀했다.

김철신 사장은 “어려운 시기 도민을 위해 재정을 신속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市, 외국인 유학생 행정인턴십...“우호 인식 확산”

광주시는 5일 광주비엔날레 컨퍼런스홀에서 ‘2021년도 외국인 유학생 행정인턴십’ 운영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행정인턴십은 방학기간 외국인 유학생들이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줘 광주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향후 지역대학 외국

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23일 광주 소재 4개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21명의 대상자들에게 대해 면접을 실시했고 최종 7명을 선발했다. /정진탄기자

## 올 출범 광주복지연구원 원장 공모 연기

### 인사청문회 조항 포함...다음달 중 진행

광주시가 (재)광주복지연구원(가칭)의 올해 출범을 앞두고 신임 원장·임원 공개모집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시의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공모가 연기됐다.

광주시는 5일 “오는 7-13일 광주복지연구원 신임 원장과 감사 등 임원 12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이달 안에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재)광주복지재단이 광주복지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과 역할 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조례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6일 공모 변경 공고를 내고, 오는 2월1일 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되면 조례 개정을 추진한 이후 공모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광주복지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조례안은 다음달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공모 일정 이전에 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의회와 협의를 거쳐 애초 광주복지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과 역할 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조례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안에 없던 인사청문회 조항을 넣기로 했다.

기존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공모에서 필수적이었던 인사청문회 조항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모 진행 후 조례 개정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공백이 길어지기도 했고 복지연구원 출범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조례 개정 전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며 “의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된 만큼 다음달 이후로 공모 접수 기간을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겨울기자

## 전남 5·18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 1인당 월 6만원...오는 15일까지 신청

전남도는 5일 “올해 민주명예수당을 신설하고 도내 거주 중인 모든 5·18민주유공자에게 매달 6만원 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남도는 생계가 어려운 5·18 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왔으나 민주주의의 발

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민주명예수당을 신설하고 지원에 나선다.

민주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될 전남지역 5·18민주유공자는 총 720여세대로 지원 희망 유공자는 오는 15일까지 거주

중인 시·군·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주명예수당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전남도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5·18위상을 제고하고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

# 우리 함께 실천해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시행

주최: 광주매일신문 후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안내

| 부과일   | 2020년 11월 13일 ~                              |
|---|--|
| 과태료   | 위반당사자 10만원<br>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   2차 위반 300만원 |
| ※ 마스크 불인정 : 망사형, 벨트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형태는 불인정 |  |
| 부과대상 예외자  | 부과대상 예외사항                                    |
| 만 14세 미만, 뇌병변, 발달장애인, 의학적<br>사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

### 마스크 쓸 땐 이렇게 하세요

모든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예외 없이  
마스크 착용해주세요

마스크 밖으로  
입과 코가 나오지 않도록  
밀착해 착용해주세요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 섭취 전/후에, 대화 시  
마스크 착용해주세요